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주시 35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제안

- 전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오랫동안 평생학습관, 모두배움터, 찾아가는 학습, 성인문해교육, 50+ 플랫폼, 평생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도 찾아가는 틈새학습, 50+ 플랫폼, 평생교육 네트워크, 시민강좌, 모두배움터, 성인문해교육, 강사은행,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학습동아리 등이 주요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제는 이러한 사업을 전주시민의 생활권 안으로 더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전주시 각 동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현재 완산구 19개 행정동, 덕진구 16개 행정동으로 총 35개 행정동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각 동별 생활권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안 내용

- 전주시 35개 모든 동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다목적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컴퓨터교육실, 작은도서관, 주민대화방, 유희 시간대 공간 등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기존 공공공간을 평생학습 거점으로 지정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 각 동 평생학습센터는 단순히 강좌를 여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학습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결하며, 학습 상담을 제공하고, 배운 내용을 지역 활동으로 이어 주는 생활권 학습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설치 방식	35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내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지정
총괄 기관	전주시평생학습관이 기획·강사풀·성과관리·온라인 플랫폼 총괄
동 단위 운영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복지관, 학교, 지역단체와 협력
필수 기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 상담, 수요조사, 학습동아리 지원, 취약계층 학습 연계
운영 인력	전담 평생학습 매니저 또는 동별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시간	평일 주간뿐 아니라 직장인·청년·돌봄 가족을 위한 야간·주말 강좌 병행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상담 병행
성과 공개	참여자 수, 만족도, 학습동아리 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 등을 공개

□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과의 변별력 확보

- 현재 전주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요가, 라인댄스, 난타, 노래교실, 캘리그라피, 탁구, 기타교실 등 문화·여가·생활체육 성격의 강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천2동의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모집 공고에는 건강교실,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탁구, 요가, 난타, 영어회화, 기타교실, 하모니카, 노래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1동의 2026년 모집 공고도 민요와 고고장구, 요가교실, 라인댄스, 풍물교실, 난타교실, 기타교실, 노래교실, 캘리그라피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평생학습센터는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대체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기능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민자치프로그램	동 평생학습센터
중심 성격	취미, 여가, 생활체육, 문화활동	생애주기별 학습, 역량 개발, 생활문제 해결, 학습 상담
운영 방식	정해진 강좌 수강 중심	수요조사 → 상담 → 맞춤 강좌 → 동아리 → 지역활동 연계
주요 대상	일반 주민 중심	청년, 중장년, 노년층, 경력단절자, 장애인, 이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세분화
프로그램 예시	요가, 노래, 난타,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AI 활용, 재취업, 성인문해, 부모교육, 마을기록, 시민교육
성과 기준	수강생 모집·출석	학습 참여율, 역량 향상, 자격·일자리 연계, 동아리 형성, 지역문제 해결
행정 역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 상담, 학습권 보장, 취약계층 발굴, 정책 연계

- 즉,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배우고 즐기는 강좌”라면, 동 평생학습센터는 “상담 받고, 배우고, 성장하고, 지역에 다시 기여하는 학습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예시

- 각 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디지털 생활역량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이용, 공공앱·정부24·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 민원, 보이스피싱 예방, 생성형 AI 기초 활용 등을 교육해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성인문해·생활문해 교육입니다. 한글 읽기·쓰기뿐 아니라 금융문해, 건강문해, 법률문해, 교통안전, 계약서 읽기, 병원·약국 이용, 전세사기 예방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50+·중장년 인생전환 교육입니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마을강사 양성, 돌봄 활동가, 문화해설, 로컬콘텐츠, 건강관리, 관계 회복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층이 다시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넷째, 청년·직장인 야간 평생학습입니다. 보고서 작성, 엑셀·데이터 기초, AI 업무 활용, 창업 기초, 재무관리, 노동권, 마음건강, 지역살이 교육 등을 야간·주말에 운영해 평생학습이 은퇴 이후 세대만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다섯째, 마을문제 해결형 시민학습입니다. 쓰레기, 주차, 골목 안전, 고립가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마을기록, 도시재생, 반려동물 문화 등 동별 문제를 학습 주제로 삼고, 주민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 여섯째, 학습동아리와 마을강사 양성입니다. 수업을 들은 시민이 다시 동아리를 만들고, 일정 과정을 거쳐 마을강사나 학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평생학습관의 강사은행·동아리 지원 사업과 연결해야 합니다.

□ 단계별 추진 방안

- 첫해에는 35개 동 전면 시행보다 시범 운영 후 확대가 적절합니다.
- **1단계: 시범 동 지정**
원도심, 신도시, 고령층 밀집 지역, 청년·직장인 밀집 지역, 산업단지 인접 지역 등 생활권 특성이 다른 동을 선정해 5~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 **2단계: 공간·수요 조사**
각 동 주민센터의 회의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유희 시간대 공간을 조사하고, 주민 대상 학습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3단계: 동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원도심은 마을기록·관광해설·상권활성화 교육, 신도시는 부모교육·청년교육, 고령층 지역은 디지털문해·건강문해, 산업지역은 재취업·안전교육 중심으로 특화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전주시 35개 동 확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35개 모든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고,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신청·상담·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조례 및 제도 개선 제안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또한 명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시민은 멀리 평생학습관까지 가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디지털 생활문해를 배우고, 중장년은 재취업과 사회공헌을 준비하며, 청년과 직장인은 야간·주말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므로 대규모 시설 신축 없이도 전주시 전체의 학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동 평생학습센터는 전주시가 추구하는 시민주권 행정과도 잘 맞습니다. 시민이 배우고, 토론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마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민선 9기 전주시가 “35개 동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핵심 과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주시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